

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해설

1. ④ 2. ② 3. ③ 4. ⑤ 5. ④ 6. ② 7. ⑤ 8. ① 9. ② 10. ③
11. ③ 12. ② 13. ④ 14. ② 15. ⑤ 16. ④
17. ① 18. ③ 19. ① 20. ⑤

1.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수단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제시문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법 원리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사법권의 독립과 위헌 법률 심사제가 그것이다

2. 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가)의 국가 공무원법과 교육 공무원법은 둘 모두 법률이다. 다만, 국가 공무원법은 일반적인 국가 공무원, 교육 공무원법은 국가 공무원 중에서 교육 공무원에 적용되므로, 국가 공무원법은 일반법이고 교육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교육 공무원에게는 교육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나)의 조례안은 상위법은 법률인 자연 공원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장은 재의를 요구하였다. 실정법상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이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3. 사회법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형식적 평등관이 초래한 문제점의 해결,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생활 관계에 대한 개입 등에서,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회법임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법과 최저임금법은 사회법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ㄱ. 정부 조직법은 공법이며, ㄴ. 부동산登記법은 절차법으로써 이 또한 공법에 속한다.

4.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친권자인 부모가 범위를 정하여 허락한 재산은 그 자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돈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물건을 구입한 행위는 유효하다. 그리고 의사 능력이 없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지만,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의 자녀가 행한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오답피하기

오늘날 친권의 본질은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통제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라기보다는, 자녀의 보호, 양육을 위한 부모의 의무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5. 상속에 대한 법적 지식의 파악

정답해설 : B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해당하지만, 상속에 있어서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는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즉, B는 제1 순위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제1 순위 직계

비속이 있을 때에는 직계 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제시된 상황에 따르면 A는 갑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A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결국 B가 제1 순위 상속인으로서 전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오답피하기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 3 순위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6. 법의식에 대한 자료 분석

정답해설 : ‘토지 소유의 제한은 가능하다’라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아, 토지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이 많다’라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아, 법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회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절차법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ㄷ. ‘호주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아, 가부장 제도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정의와 합목적성에 대한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제시문에 따르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의미하는 정의는 추상적 이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 즉, 정의에서 법의 내용을 도출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문제의 해답은 법의 목적에 입각하여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을 구별해주는 구체적 기준으로서 합목적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즉, 정의와 함께 합목적성이란 법이념이 동시에 요청된다 하겠다.

8.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리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현행범의 경우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따르면,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오답피하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이 폭행에 의하여 진술된 것일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9. 형사 재판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이며, 고등법원에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오답피하기

① 배심제는 일반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판사는 형량만 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배심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판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③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재판은 형사 재판이다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은 민사 재판이다.

④ 행정법규의 적용이나 행정법상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은 행정 재판이다.

⑤ 피고인이 불출석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0. 환경 영향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제도는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이다.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계획 등에 대해 환경을 미리 검토, 분석, 평가하여 개발로 말미암아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개발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위한 수단이다. 즉,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1. 이혼의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①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으로서, 그 이유나 원인, 동기는 묻지 않으며, 자유로운 이혼 의사 합의만 있으면 된다.

② 이혼은 신중해야 하므로, 협의상 이혼이라도 가정 법원에서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⑤ 이혼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면접 교섭권, 부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 등의 발생한다. 이에 반해 ③ 을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을은 과실 있는 상대방, 즉 갑에게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행정 소송의 유형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취소 소송은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오답피하기

① 기관 소송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 또는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③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불행사의 결과로 생긴 법률 관계를 포함하여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다.

④ 민중 소송은 선거 무효 소송과 같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려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13. 기본권의 한계 파악

정답해설 :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갖는 한계를,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 행사의 한계를,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은 제한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기본권은 한계가 있으며,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4. 특수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정답해설 : ㄱ. 을의 불법 행위로 갑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을은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갖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 간에 배상액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ㄷ. 타인을 사용하여 일정한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것을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용자 책임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사용자 관계 또는 사문 감독 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

오답피하기

ㄴ. 채무 불이행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ㄹ. 갑과 정 사이에는 법률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15.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첫 번째 사례에서 갑은 형사 보상 청구권, 두 번째 사례에서 을은 국가 구조 청구권, 세 번째 사례에서 병은 청원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모두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이다.

오답피하기

ㄱ. 권리와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기본권으로는 재산권, 교육권, 환경권, 근로의 권리 등이 있다.

ㄴ. 국민 투표권을 의미한다.

16.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제시된 사례들에서 나오는 갑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법성이란 사회의 법 질서를 위반함으로써 법적으로 부정적인 가피 판단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오답피하기

구성 요건 해당성이란 그 행위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함을 의미하며, 책임성이란 위법 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17. 위법성 조각 사유의 유형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가)와 (나)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정당 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가)의 사례는 자기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며, (나)의 사례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다) 자구 행위에 해당한다. 자구 행위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침해당한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라)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18.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첫 번째 법 조항의 목적은 방문 판매자로부터 미성년자가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법 조항의 목적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불공정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즉, 두 법조문 모두 계약 공정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계약 공정의 원칙이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매우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오답피하기

①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기초하

여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과실 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④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란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 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⑤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란 국가나 다른 개인은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해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19. 근로 기준법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법률 조항은 근로 기준법의 내용이다. 근로 기준법은, 개별적 근로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그 밖의 생활 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최저 근로 조건을 정하고, 감독 관청으로 하여금 근로 감독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이다.

오답피하기

ㄷ, ㄹ.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20. 법률 구조 제도의 의의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사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제도는 법률 구조 제도이다. 법률 구조는,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 비용이 없어서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국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 소송비용 대여,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 대행 등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